

동북아 에너지 사업의 역동적 전개: 민간의 역할

2006. 4. 27

- I. 중국의 진출 여건
- II. 진출 애로사항
- III. 정부 정책 시사점

김주영 선임연구원

한국수출입은행



1. 중국의 진출 여건

< 투자 환경 변화 >

□ 내부적: 고도성장의 후유증,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

○ 구조조정 추진과 민간기업의 경영활동 보장

○ 주택과 자동차 수요증대 추진

○ 지역간 도·농간 소득격차

□ 외부적: 선진국 중심으로 국제규범 준수와 이행에 대한 압력 증대

○ 지적재산권 보호와 위안화 환율 왜곡 시정 요구

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변화

화합사회
(和諧社會)

국유기업 개혁

- 은행 부실채권 해소

실업 해소



✓ 민간기업 인정

⇒ ✓ 중복투자

내수 확대

- 아시아 금융위기로
대외수요 위축

✓ 주택, 자동차 구입 허용

균형발전

✓ 개발구 설치
✓ 인프라 확충

共富論

자원수요 급증
환경오염



환경보호
자원 절약

국제 규범 준수

✓ WTO 가입

선진국 압력



지재권 보호
환율 왜곡 시정

외국인투자 유치

✓ 고용 확대
✓ 제조 분야



첨단기술
서비스 분야

- 투자환경 변화가 두드러진 분야

- 환경오염 배출이 높거나 에너지와 자원 다소비 관련 분야
-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층 소득향상과 관련된 분야
- 국유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요금 현실화 및 기업 소득세의 단일화 분야
- 마케팅과 관련된 광고 분야
-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

1. 위안화 환율

□ 위안화 환율의 급격한 절상 가능성

-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위한 중국정부의 최근 조치

- '05. 5: 외환시장 거래가 위안화와 외화에서 외화간의 거래로 확대
- '05. 8: 파생상품의 취급을 인가 받은 모든 외국환은행이 선물환, SWAP 거래 가능
- '05. 12: 외환시장 조성자를 Citibank, HSBC 등 6개 외국계 은행을 포함한 13개 은행으로 확대
외환시장의 매매기준율이 전일 종가에서 당일 개장 전 13개 은행의 동시 호가의 평균값으로 결정
- '04. 4: 기업의 외화보유 확대(수입의 80% + 지출의 50%)
개인 연 2만 달러 구입 보유
은행, 증권회사의 기업/개인 자산의 해외 증권투자 허용

2. 환경

□ 환경오염으로 인한 법정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판결

- 지난해 12월 법원이 제지회사에 230만 위안 지급 판결

- 2004년 6월 네이멍구(內蒙古) 소재 제지회사 등이 100만m³ 상당의 오수를 무단 방출, 황허(黃河) 오염으로 바오터우(包頭)시 2주 동안 취수 중단
- 지난해 11월 지린성(吉林省)에서 CNPC(中國石油天然氣集團)의 지린석유화학(吉林石化)의 벤젠공장 폭발로 인해 100만 톤 규모의 벤젠이 송화장(松花江)으로 유입되는 대규모 오염사고
- 동 사건 이후 금년 1월말까지 심각한 환경오염 사건이 45건 추가로 발생

< 환경 관련 정부정책 >

□ 환경관련 법규 정비

- 생태환경 보호, 환경오염 억제 등과 관련된 법률 제정 가속
 - 2010년까지 도시지역 하수처리비율 70%, 생활 쓰레기 처리 비율 60% 이상으로 제고
 - 환경오염의 총량제와 허가제를 실시하고 인가범위를 초과 배출하는 오염에 대한 비용 부과

□ 모든 프로젝트와 기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실시

-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환경오염 정도를 평가, 2010년까지는 도시지역의 모든 기업에 전면 시행

□ 보다 엄격해진 수출입 규제

- 금년 1월부터 고 오염, 에너지와 자원 다소비 산업의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규제, 부족한 천연자원에 대한 수출 제한

3. 세제

□ 내.외자 기업간의 기업소득세의 단일화 추진

- 내자기업의 세율이 30%인 반면,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제특구와 경제기술 개발구, 연해개방도시, 일반지역에 따라 각각 15%, 24%, 30%
- 내년 3월에 단일 기업소득세법이 통과되어 내년이나 내후년에 실시될 예정, 통합 기업소득세율은 24~27%에서 결정될 전망

□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억제해 왔던 공공요금 현실화

-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억제해 왔던 상수도, 전기, 휘발유, 천연가스 등 공공요금 현실화

⇒ 공공재 가격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향후 지속적인 인상 불가피

4. 임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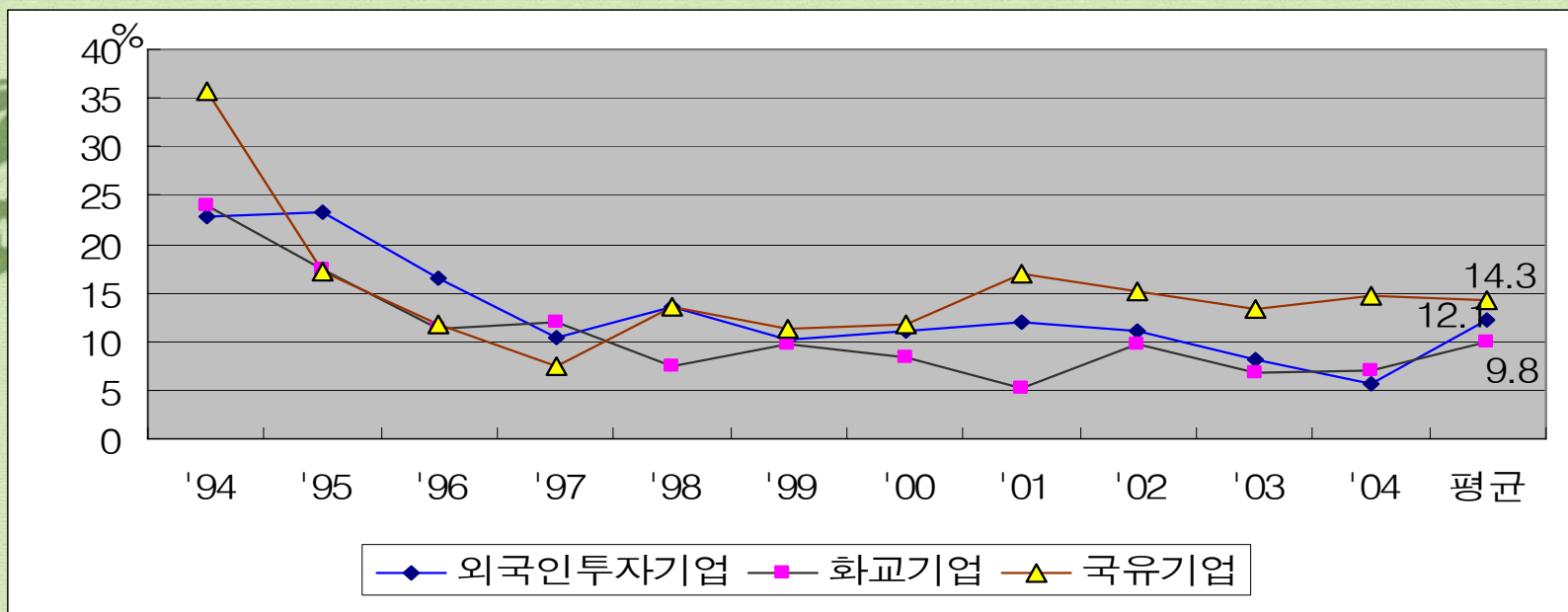
□ 소득 증대를 위해 잦은 최저임금 인상

- 2004년 3월부터 ‘최저 임금규정’(最低工資規定) 시행
 - 각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이의 실시세척 제정, 최소 2년에 1회 이상 최저임금 수준 조정
 - 장쑤성(江蘇省): 2005년 7월 620위안/월 → 11월에 690위안/월

지방	최저임금(위안)	시행시기
北京	580	2005. 7. 1
上海, 深圳	690	"
江蘇	690	2005. 11. 1
浙江	670	2005. 12. 1
山東	530	2005. 1. 1
天津	590	2005. 7. 1
湖北	460	2005. 3. 1

□ 개인소득세의 면세점 월 1,600위안으로 상향 조정

- 2005년 10월 개정 개인소득세법에서는 면세점을 월 1,600위안으로 800위안(약 100달러)상향 조정
-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이 국유기업의 최소 1.2배 수준
 - 연간 평균 외국인투자기업 20,440위안, 국유기업 16,729위안, 민간기업 16,259위안, 화교기업 15,727위안('04)



□ 거세지고 있는 장애인의 고용 압력 요구

- 실업률 증가와 사회복지 차원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일정비율의 장애인 고용 요구
- 각 지방별 장애인 최저 의무 고용비율

지방	고용비율(%)	지방	고용비율(%)
北京	1.7	浙江	1.5
上海	1.6	廣東	1.5
天津	1.5	湖南	1.5
江蘇	1.5	安徽	1.5
遼寧	1.7	陝西	1.5
山東	1.5	廣西	1.5~2
河北	1.5	重慶	1.5
吉林	1.6	四川	1.5
黑龍江	1.5	湖北	1.5

5. 허위광고 대응

□ 광고 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정 적용

- P & G(Procter & Gamble)가 지난해 Pantene(潘婷) 샴푸 등 4개 제품과 SK-II 스킨 크림에 대한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여 베이징과 저장(浙江)에서 광고 금지, 장시 난창(江西省 南昌)에서 24,000 달러의 벌금 부과
- 광고법(廣告法, 1995년 2월)에서는 광고 문구에 사용되는 숫자, 통계자료, 조사결과 등이 사실에 부합해야 된다고 명시
 - 광고법(中華人民共和國廣告法)에서는 다른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폄하하는 광고(제12조)와 신문보도 형식의 광고(제13조)도 금지

II. 중국 진출 애로사항

1. 잦은 정책 변화

□ 정부의 잦은 정책변화로 인해 계속 경영 어려움

- 철강 산업의 외국인투자 ‘장려’ 대상 품목 변화
 - 1995년 6월(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): 냉연, 열연 강판, 합금 강판, 특수강판
 - 2002년 3월("): 대규모 강판, 합금 강판, 직접 환원철과 용융 환원철
 - 2004년 11월("): 직접 환원철과 용융 환원철
- 2005년 7월 ‘철강산업 발전정책’의 외국기업 진입자격 요건
 - 전년도 보통강 생산량이 1,000만 톤이거나 특수강 생산량이 100만 톤 이상이고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해야 투자 가능
 - 경영권 장악 불가
 - M & A 등의 방식을 통해서만 철강기업이 없는 곳에 신규로 공장 건설 가능

2. 사유재산 보호 불확실

□ 정부가 임의로 민간기업의 유전개발 권리 회수

- 개발된 유전자산에 대해 적절한 보상 미흡
 - 산시성(陝西省) 6만여 명이 1,000여 개 민간 유전개발기업을 설립하고 70억 위안을 투자
 - 개발한 유전자산의 가치 140억 위안 상당

* 민간부문의 유전개발 경과

- 1994. 4: CNPC가 중앙정부의 인가를 얻어 (陝西省) 산시성 정부와 ‘산시성 북부지역의 석유자원 개발 협의서’ 체결
 - 1999. 10: 국가경제무역위가 유전의 난개발, 자원 낭비,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대대적인 정비의 필요성 제기
 - 2003. 3: 유전의 소유권, 경영권, 수익권 모두 국유화
- 민간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나 정부의 압력 행사 우려

□ 개발구 조성 등을 위해 농민의 경작지 사용권 임의 회수 빈발

- 지난해 12월 광둥성(廣東省)의 산웨이(汕尾)시의 둥저우(東洲)에 발전소 건설을 위한 경작지 사용권의 회수
 - 둥저우에서 발생한 경작지 사용권 회수는 과거와 달리 총기를 사용하여 경작지 사용권 회수에 반대하는 농민 시위대를 진압, 20여명 사망

3. 의사결정 지연

□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 지연으로 신속한 사업 진행 곤란

- 행정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 지연
- 합작법인의 의사결정 시에 중요 사항은 만장일치 결정이 일반적
 - 정관의 수정, 자본금의 증액, 감액 및 양도, 기업의 분리 및 합병, 중도 해산과 청산 등
 - 중요 사항에 대한 일치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중국측이 대부분 사항에 대해 만장일치 가결 요구

⇒ 중국의 합의 문화

4. 법 집행의 차별성

□ 외국인투자기업에 보다 엄격한 원칙과 규정 준수 요구

-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관계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강제 집행 곤란

- 외국인투자기업에 보다 엄격한 준수 요구

⇒ 지적재산권 보호와 위안화 환율 왜곡 시정 등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거세질수록 이에 상응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 높음

5. 중앙과 지방정부 정책 일관성 부재

□ 上有政策, 下有對策

III. 정부 정책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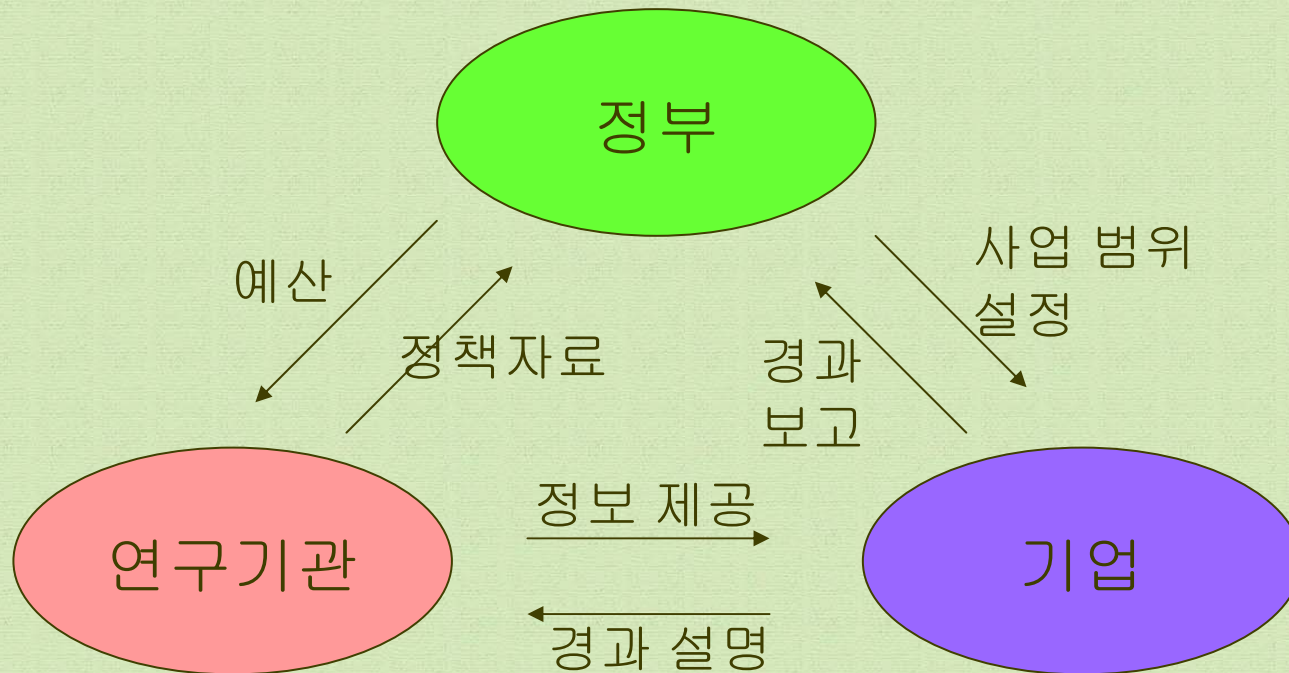
□ 정부의 선도적 역할

- 에너지 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정상회의,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정부의 안전판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
- 기업 스스로 접근할 경우 현지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업 시작도 전에 손해 보거나 지칠 가능성이 높음

□ 식민지를 경영하는 자세로 각국 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

- 장기적으로 국가별로 문화, 산업 등 다양한 전문가 육성 필요
- 개도국 유학생의 적극적인 국내 유치

기업, 연구기관, 정부의 협력체제 구축





감사합니다

02) 3779-6647

Jykim@koreaexim.go.kr